



교 협 통 신



교협통신 || 제009호 || 2014년 6월 12일 || 발행처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 발행인 송재용 || professor.dankook.ac.kr

교협 25년, “소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3기 교수협의회(회장 송재용)는 지난 3월 4일 신임교수 축전 발송을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조용히 한 학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임기 2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출범 초기인 201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활동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그간 교협은 학내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산하기구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교협통신》은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담아내어 소통의 장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교협통신》은 학내의 소통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3기 교협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1989년 출범한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5년의 역사 속에 임기 2년으로 규정된 회칙에 따라 12명의 회장을 배출했으며, 2013년 3월 제13기 교협이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협에서는 지난 25년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제11기 교협(회장 김성종)에서 발간한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20년사』를 들추어 보았다. 우리 대학의 교협을 성사시키기 위한 선배 교수님들의 노력과 애환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제1기 교협이 출범하기까지 두 번의 실패¹⁾를 경험한 단국대학교 교협의 역사는 오늘의 교협 구성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에 지난 1989년 교협이 출범한 시기부터 10년간의 족적을 살펴보았다.

제1기 교협(1989~1990)에서는 ① 9~10시간의 책임시간을 9시간으로 통일, ② 교수의 해외 파견의 합리적 방안 및 안식년제 도입, ③ 학교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 촉구 및 대학발전 장단기 계획의 구체화, ④ 학과장 중심의 예산 편성 등과 같은 내용을 학교 당국에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2기 교협(1991~1992)에서는 제1기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운영위원회의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연구 신청자격(근무년수)의 통일 및 연수기회의 확대에 관한 연구>, <연구년(안식년) 도입에 관한 연구>, <학과 및 커리큘럼 개정> 등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교수식당의 운영 개선, 시간강사를 위한 휴게실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제3기(1993~1994), 제4기(1995~1996), 제5기(1997~1998) 교협은 서울캠퍼스 이전이라는 혼란 속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논의가 주종을 이룬다. 교협 10년차를 맞이하는 제6기(1999~2000)에서는 춘·추계 등반대회를 시작

1) 첫 번째 시도는 1980년 초 학원자율화 및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해 4월 16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교수협의회’ 구성을 결정하였으나, ‘5·17 계엄령’에 의한 휴교령에 따라 의장 선출이 무산되고 이름만 남게 되는 비운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는 1987년 5월 11일 본교 교수 24인의 이름으로 ‘현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선언문과 함께 교협의 출범을 시도하였으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단체의 모습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20년사』(2010), p.27-29.

하였고, 컴퓨터 지급 및 친절교육 정례화, 2002년 전면 실시 예정인 연봉제 및 계약제 반대 등을 의제로 삼았다. 교협의 학칙 기구화 추진 등과 같은 내용도 눈에 띈다.

짧은 지면을 통해 선배 교수들의 업적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선배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사안의 경중만 달리할 뿐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책임시간 문제, 연구년 운영과 연구비 문제, 교수식당 개선, 컴퓨터 지급 및 직원들의 친절 교육 등은 여전한 과제이다. 물론 선배 교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교협 20년의 역사 속에 다 들어 있다. 문제는 수없이 제안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후속 세대들의 노력 부재에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 전임 회기의 교협에서 논의된 사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떠했고,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인수인계와 목표관리가 수반되었다면, 교협은 대학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주춧돌이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협은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안겨 무관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대학 당국에게는 성과 관리를 다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만 일삼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시간 동안 교협에서 제기하였던 현안을 미봉책으로 남긴 채 구성원들의 관심과 대학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교협의 실무를 담당해 온 회장단과 집행부의 노력 부재에 있다. 동시에 “회비를 냈으니 최소한 수건 하나 정도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교협은 활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단체연금보험 사례와 같이 400여 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노조에게는 양해를 구하면서도 1,000여 명의 교수

를 대표하는 교협에는 어떠한 협의도 구하지 않은 당국자들의 태도는 교협의 존재감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본회의의 구성원이며, 교협의 운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험자들이라는 점에서 교협의 역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협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경쟁 위주의 대학교육 정책과 성과 중심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따른 교수들 사이의 소통문화 부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출처: 연합뉴스 2013년 10월 17일자 보도 자료

2014년 현재,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제13기 교협은 2014년 1학기 동안 교협의 활동에 대한 성찰과 함께 집행부 내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그간 본회의의 구성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했던 일관된 목소리는 ‘학내 소통 부재’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였다. 대학의 최고경영자는 교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내 소통 부재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부서장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내부의 소통 부재를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부서장들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두가 학내

의 소통 부재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무엇이 학내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가?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키워드 중 하나이다. 소통이 된다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받아쓴다면 서로 통(通)하여 오해가 없으면 된다. 곧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에게 잘 전달하고, 남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잘 들으면 된다. 이를 학내 소통으로 확대하면 대학 당국이 하고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전달하여 소통체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면 된다. 역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대학 당국에 잘 전달되고, 당국자들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책에 잘 반영하면 된다. 굳이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더라도 학생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쉬운 용어이다. 문제는 우리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통 부재의 수준이 지극히 원초적이라는 점이다. 상향식 소통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향식 소통의 단절 문제가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1일 학내 구성원들은 총장 비서실장 명의로 그룹웨어를 통해 발송한 “2014학년도 제2차 합동 실·처장 회의결과 통보”를 통해 관련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를 공람한 바 있다. 학내 부서들의 업무보고와 그에 따른 회의 결과 내용들이다. 첨부한 자료에는 기획실의 대학평가지표를 필두로 하여 국제처, 교무처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양 캠퍼스의 주요 업무들을 망라하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교무회의 내용을 공람케 한 것은 학내 소통 부재에 따른 대안으로 학사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학 당국의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평교수들이 소화해 내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또한 회의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이미 누적된 자료들로, 갑작스럽게 이를 공표하고 이행 사항을 보고 조치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공문에 따른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학과 단위는 물론 개별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연 결과 보고 내용에 구성원들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따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국자들이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우리 대학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부재의 원인은 첫째, 대학본부와 학과 행정 간의 거리감에 있다. 대학 행정의 일선에 있는 학과 행정이 비정규직인 학과 조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단과대학의 교학행정 기능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단과대학의 교학과는 대학본부와 소속 학과들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단위별 학사업무의 총괄관리에 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배포와 보고서 취합이라는 단순 기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이후 무기능에 가깝다는 단과대학 교학과를 폐지하거나 학과조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대학본부와 교원들 사이의 거리감에 있다. 학사 업무의 개별 책임자인 교원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고유한 대학 기능의 담당자들이다. 교원들은 업무 특성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최근 교원업적 강화 정책과 더불어 취업률 제고라는 당위적인 의무 부과 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교육·연구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룹웨어의 등장으로 각종 공문의 수·발신까지 책무로 부과하고 있어 학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학과장들의 책임시간을 7.5시간으로 경감한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사행정의 변경이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총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이 대학 당국의 정책 변화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정책 의도를 오해하는 이유이다. 평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기보다는 대학본부의 당국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과 보상 전략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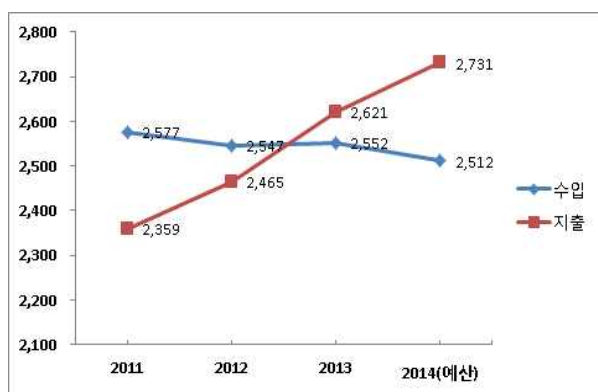
셋째, 대학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SI사업의 결과가 낡은 거리감이다. 현행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한 서류 작성 절차와 출력을 통한 원본 제출이라는 중복 행정, 불필요한 공문과잉으로 인한 열람 기피와 정작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문 누락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근무시간 내 내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직원들과 달리 온라인과 일정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하는 교원들의 업무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업무를 기본 모듈로 구성한 현행 그룹웨어 시스템으로 인하여 교원들은 ‘정보과잉’과 ‘정보소외’라는 이중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학 당국은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93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SI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 40여억 원을 들여 오픈한 현행 그룹웨어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그간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하지만 기획과 진행과정의 불통상태가 지속되는 한 구성원들은 또 다시 예산만 낭비하고 학내 소통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구성원들의 소통이 보장되지 않는 전산망의 구축은 또 다른 불통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는 소통을 위한 촉매제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그늘은 왜곡된 의사소통 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불통의 요인은 네트워크에 갇힌 인사시스템에 대한 거리감이다. 대학 당국은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본부 보직에 대해 보수적인 인사정책을 고수해 왔다. 심지어 재정 곤란을 이유로 겸직을 보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그 동안 직원노조는 물론 학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 폐해는 학내 불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최근 ‘세월호’의 그늘 속에 요행으로 묻힌 ‘한남 더힐 사태’의 수습 과정을 지켜본 학내의 구성원들은 대외적인 위기감보다는 학내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더 우려하고 있다. 6월 말에 예정된 보직 인사를 놓고 벌어지는 각종 소문들이 구성원들의 사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대학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려면 최소한 미래지향적인 인사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성장 동력의 안정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통의 중심에는 자기로부터의 혁명(내부 혁신)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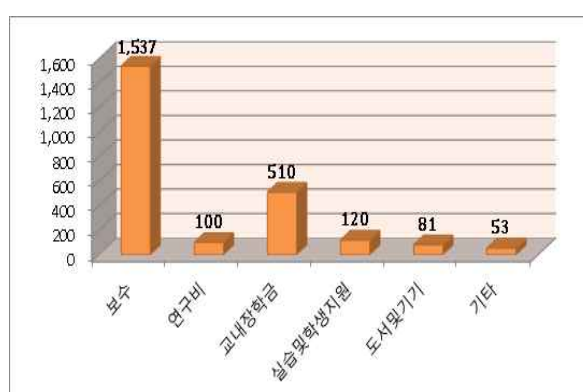
대학재정 위기를 바라보는 눈

지난 2~3년 사이 학내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학교에 돈이 없다.”라는 구두 회신이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연구년 축소, 연구지원비와 연구장려금 축소, 연구보조장학생 선발 제한 등 각종 연구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학은 다른 예산은 가만히 두고 ‘교육’ 및 ‘연구’ 관련된 예산만 줄이고 있다며, “학교 당국이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오가고 있다. 여기에 강화된 연구업적과 이공계열의 종합실험실의 부재에 따른 연구 장애, 우수 대학원생의 유치 곤란이라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공계열의 경우 학내에 체계적인 실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습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인근 대학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것이 단국대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교비회계를 살펴볼 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대학의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434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여유자금은 179억 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데에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 및 전임교원 확보 요구와 같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재정 관련 운영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운영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재정 적자 폭은 커지고 있다.



<운영수입 및 지출 추이(단위: 억 원)>



<2014년 운영지출 대비 계정 분석(단위: 억 원)>

실제 2014년 운영지출 예산 2,731억 원 중 보수(임금) 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335억 원 대비 202억 원(15% 수준)이 증가한 1,537억 원(교원 1,186억 원+직원 35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인건비에 관리운영비 320억 원(12% 수준)을 포함하면 운영지출 예산 중 ‘인건비+관리운영비’는 1,857억 원으로 총 지출 예산 중 67% 정도의 구성비를 차지한다. 여기에 3~4% 수준의 연구비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지출(교내장학금, 도서구입, 실습비 등) 예산은 30% 정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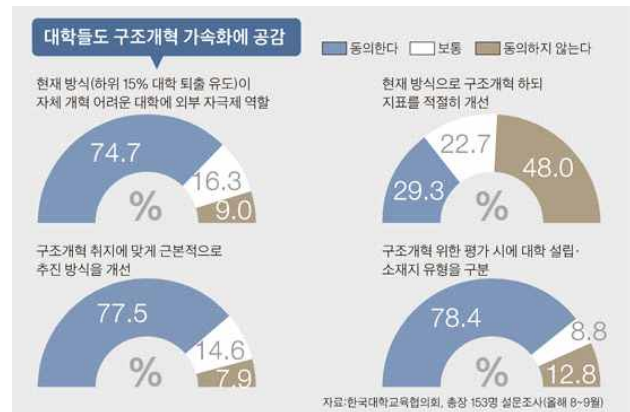
지난 4월 10일 남보우 기획실장은 이러한 우리 대학의 재정 현황을 고려하여 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며 2014년 운영 차액을 통해 219억 원 정도의 수지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

다. 더불어 당장의 재정 곤란으로 각종 교육·연구 환경이 위축되고 있으나, 2014년 한 해 동안 대학의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2015년부터 일시적인 긴축재정을 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자는 우리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획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미 상반기 통합운영위원회의를 종료한 상태인지라 《교협통신》을 통해 대학재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내용 중 재정 관련 지표들은 기획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회의 분석과 편집자의 해석을 추가한 것으로 실제 운용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대학 당국자들이 제시한 단순한 압박으로 받아들여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3년 내에 대학 정원의 7%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대학도 이를 반영하여 2016년에는 120명, 2017년에는 80명 규모의 정원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의 정원 감축은 재정수입 악화로 이어지고, 대학 재정의 악화는 대학 경쟁력 상실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구조 조정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자체 개혁이 어려운 대학들에게는 외부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내 대학 총장들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타개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당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당분간 대학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불균등이라는 모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당국자들이 환경 변화에 지나치게 방만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담당자들은 소속 기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재정운용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예고된 대학재정의 위험성과 캠퍼스 이전에 따른 유동성 위기라는 우리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확보하고 대학재정의 악화를 방지했어야 옳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대학의 재정 현실을 솔직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 분담과 함께 공동 대응이라는 대학 당국의 제안에 이를 수용하지 못할 구성원은 없을 것이다. 다만,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방치해 온 관련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진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대학재정 위기의 현실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198,300원, 자료구입비는 122,300원으로 <표 1>과 같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볼 때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자료구입비(단위 : 천원)

대 학	교육비 (2012기준)	자료구입비 (2013기준)	대 학	교육비 (2012기준)	자료구입비 (2013기준)
건 국 대	13,490.3	129.3	송 실 대	11,089.9	114.0
경 희 대	15,978.0	208.0	아 주 대	17,692.7	200.9
고 려 대	18,496.1	196.4	연 세 대	26,157.8	237.0
국 민 대	10,493.4	137.7	이 화 여 대	18,643.9	207.5
단 국 대	11,198.3	122.3	인 하 대	13,652.6	152.0
동 국 대	12,270.2	123.0	중 앙 대	12,895.0	134.0
서 강 대	19,525.3	221.4	한 국 외 대	9,872.6	150.0
성 균 관 대	20,634.0	198.5	한 양 대	18,169.2	193.1
숙 명 여 대	11,835.4	165.5	홍 익 대	10,066.3	121.5
대 학 전 체 평 균	11,585.9	98.8	수도권대학 평 균	12,778.3	110.7

교내 연구비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정보 공시에서 밝히고 있는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는 6,839,700원으로 수도권 대학 평균 7,985,8900원과 비교하면 역시 평균점 이하이다. 반면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0.8편²⁾, SCI급에는 0.3편³⁾으로 보고되고 있어 평균을 웃돌고 있다. <표 2>의 내용은 연구지원비가 높을수록 산출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연구물의 질, 이공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구조 및 산업협력과 같은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표 2>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및 전임교원 1인당 논문 편수(단위 : 천원, 편)

대 학	대내 연구비	KCI 편수	SCI급 편수	대 학	대내 연구비	KCI 편수	SCI급 편수
건 국 대	5,076.8	0.7	0.6	송 실 대	4,302.6	0.8	0.2
경 희 대	13,126.4	0.5	0.6	아 주 대	10,672.9	0.4	0.6
고 려 대	9,884.5	0.5	0.8	연 세 대	6,098.6	0.4	0.8
국 민 대	5,954.0	0.5	0.3	이 화 여 대	8,310.6	0.8	0.3
단 국 대	6,839.7	0.8	0.3	인 하 대	2,637.4	0.5	0.6
동 국 대	8,515.9	0.7	0.4	중 앙 대	11,711.8	0.7	0.5
서 강 대	7,539.9	0.5	0.5	한 국 외 대	5,543.0	1.0	0.2
성 균 관 대	18,938.8	0.4	0.8	한 양 대	20,784.1	0.6	0.6
숙 명 여 대	10,065.6	0.9	0.1	홍 익 대	7,485.0	0.5	0.2

2) 등재지(후보지 포함)를 기준으로 대학전체 평균은 0.5편, 수도권 대학 평균 0.6편, 비수도권 대학 평균은 0.5편이다.

3) SCI급/SCOPUS를 기준으로 대학전체 평균은 0.3편, 수도권 대학 평균 0.4편, 비수도권 대학 평균은 0.2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은 여타의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살필 수 있다. 최근 제시된 연구지원비 조정(안), 연구년 기준 강화, 연구보조장학금의 축소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례로 2014년에 신규 임용된 교원들에게는 3,100점 이상(150점 기준, 연간 4편 수준)의 연구업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는 2014년에 신규 임용된 교수들을 6년 후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웃지 못 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구업적을 달성한 그룹은 연구 환경이 더 나은 대학으로 이동해 갈 것이고, 연구업적을 채우지 못한 그룹은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경쟁 목표 설정은 연구윤리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물론 일부 교원들의 자조적인 비유이겠지만,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대해서 대학 당국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우수한 연구실적은 안정적으로 조성된 연구 환경 기반 속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 구성원의 대다수는 대학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법인 전입금 부족을 거론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평가에서도 낮은 법정부담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의 낮은 법정부담금이 문제의 본질인가에 대해서는 긍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대학은 캠퍼스 이전 사업으로 오랜 시간 혼란을 겪어 왔고, 결국 대학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죽전캠퍼스로 이전 이후 2014년 현재 우리 대학의 수익용재산보유액은 전국 대학 중 5위권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의 자산 구조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캠퍼스 이전을 위해 학교법인이 막대한 자산을 투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캠퍼스 이전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대학의 부지 매입과 시설 투자에 자금을 활용한 이상 유동성이 보장된 여유 자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캠퍼스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시설물 건축에 자산을 투여한 학교법인을 향해 법정부담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그동안 쌓아온 교육·연구 업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재정 여건과 교육 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당국자들의 리더십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수익 사업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대학법인의 재정구조 아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의 집약이 필요해 보인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역설이 늘 현자(賢者)들의 어법은 아니지만 긍정의 수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견해를 신뢰하며, 구성원들의 공동보조 속에 함께 나아가려는 경영진과 당국자들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어 본다. 

세월호 참사 조의금 모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한민국의 침몰이라고 비유될 만큼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사연을 남긴 채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각계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속에 일각에서는 모금 구성에 대한 조용한 시도도 일었다. 4월 26일 예정되었던 ‘신임교원 환영 및 춘계등반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본회 집행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2013년에 우천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13기 교협 의 입장에서는 사고수습 추이를 지켜보며 행사 진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구성원들이 행사를 취소하자는 의견을 본회에 전달해 왔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모아져 등반대회를 가을학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교협 차원의 조의금을 조성하자는 논의 속에 조의금 조성 범위 및 전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선부른 모금 계획이 유족들의 반감을 사는 한편, 정부 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 비자발적인 모금을 조성하여 공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소식 등을 전해들은 본회에서는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 까지 기금 조성을 늦추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사들은 각종 재난사고 수습과정에서 국민들의 자선심을 동원한 모금운동을 펼쳐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방송사의 모금 관련 프로그램 진행 비용과 통신비 등의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재난현장에 전달되는 기금은 기부액의 36%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 속에 직원 노동조합에서는 대학 당국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정액(기본급의 1%)의 모금을 조성키로 하고, 오는 5월 15일 지급되는 급여에서 일시 공제기로 했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이에 본회는 집행부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회신하고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 모금조성을 유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총무인사처에서는 5월 1일 총장님께서 조문 일정이 잡혔으니 본회 구성원들의 조의금 공제와 관련하여 급히 답변을 요구하는 연락이 있었고, 이에 본회는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가. 현 상태에서의 모금은 시기상 옳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모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 조성된 모금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 2) ‘조성된 모금의 용처(장학금, 조의금, 재난구제금, 위로금의 형태 등)을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태가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 나. 조의금을 각출하는 것은 교수 개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본회 구성원들이 모금 찬반 투표를 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더욱이 대학 당국에서 제시하는 ‘공제’는 반대한다. 본회가 존재하고 충분히 본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 다. 조의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단국대학교의 이름으로 조의금이 전달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교수협회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대학 차원의 모금 전달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기관임을 고려하여 단원고에 직접 장학기금(① 생존자 대상,

② 희생자 대상, ③ 단원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국대학교 장학기금’ 형태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 지회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이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2014년 5월 2일 총무처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조의금 모금에 대한 교수협의회 결정 사항”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을 통해 본회는 그 전달 방법, 시기 및 형태(희생자 유족, 단원고, 언론 또는 국가 범위의 모금기관 등)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도출될 때까지 모금운동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을 통보(5월 1일)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일정액(기본급의 1%)을 조의금으로 일시 공제하기로 한 대학 당국의 결정은 본회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취소를 요청하였다. 덧붙여 교원들의 합의가 도출되고 적정 시기가 결정되면 추후 공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본회의 취소 요청 공문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학교 당국 차원의 본회 소속 모금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모금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금번 세월호 참사 관련 모금 조성 과정을 통해 학내 소통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본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갈 것이다.

첫째, 학내 각종 기금 및 모금 조성 과정에서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고 있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당위성이 인정되는 기금 조성 과정에서도 교수협회의 의사 수렴하지 않은 채, 직원노조와의 협의 사항을 가지고 직원노조를 통해 교협에 통보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교수협회는 비교섭단체로서 임의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대학교수는 그 직무와 법률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을 통한 직접 교섭 대상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게 하는 국내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본회는 ‘단국대학교 교직원공제회’의 구성원으로 관련 기금 조성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를 한 개인들의 단체이다. 향후 교직원 공제회비의 조성 내역과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반드시 본회와의 협의 하에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공제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 운영위원들께서는 본회 회원들이 공제회의 규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 교수 전별모임 보고

2013학년도 2학기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교에 재직해 오신 아홉 분의 교수님들이 죽전과 천안의 교정을 떠나게 되었다. 지난 2월 27일 11시 죽전캠퍼스 인문관 소극장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정년퇴임식이 거행되었다. 교과부 및 학교 당국에서는 재직하는 동안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와 업적에 따라 각종 훈·포장을 수여하였다. 본회에서는 ‘정년퇴임 기념패’와 함께 기념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지난 학기에 정년퇴임한 교수들은 다음과 같다.



마 영 대 교수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과



이 종 철 교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정 일 현 교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정 학 수 교수
음악대학
성악과

죽전캠퍼스
하단 천안캠퍼스
(가나다 순)



강 종 옥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김 정 우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김 학 문 교수
공학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서 병 문 교수
공학대학
멀티미디어공학과



이 경 숙 교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한편, 본회에서는 죽전·천안 지회별로 지난 2월 10일과 11일 12시에 정년퇴임을 맞게 되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영대 교수님, 이종철 교수님, 정일현 교수님, 정학수 교수님, 김정우 교수님, 김학문 교수님, 이경숙 교수님께서 참석하시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별모임은 지난번 전별모임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점(죽전, 천안 일원화 행사진행)을 개선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별모임 자리를 통해 학사행정 개선에 대한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퇴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구축과 안내, 정년퇴임 전 연구실 퇴거와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후배 교수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퇴임 후의 생활을 대비한 준비 사항 등은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글로벌한 백묵처방이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은퇴 이후에도 비전이 숨 쉬는 뜻 깊은 자리였다. 



<죽전지회 전별모임 기념 촬영>



<천안지회 전별모임 중 담소 장면>

앞으로의 주요 활동 계획

지금까지 진행된 교협의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완하면서 그 결과를 전체 교수님들께 수시로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교수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간략하게나마 안내하기로 하였다. 회장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가지고 6월 5일 18시에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다.

01. 대학연구지원비 반납 및 티칭포트폴리오 관련 건

- 대학연구비 반납 관련 내규 수정 여부 문의 및 내용 공지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티칭포트폴리오의 운영과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02. 세월호 참사 조의금 관련 건

- 모금은 시행하되 그 시기는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결정

03. 연금보험 환수액 관련 건

- 총무처에 환수액 보존방안(시기) 확인 요청 공문 발송 예정

04. 연구년 관련 건

- 취업률 등 학과평가와 연계한 연구년 재고 공문 발송 및 교무처장 면담 예정

05. 급여 등 성과급제 도입 관련 건

- 관련부서 논의 및 기획실장 면담 예정

06. 교협 통신 및 교협회보 건

- 교협통신 : 그간 장기 결호로 인하여 제9호의 분량이 많아 적정 페이지로 구성하고 후속 기사는 제10호를 6월 25일 이내 발송하도록 조치
- 교협회보 : 2014년 8월 말, 2015년 2월 말 발송 예정

07. 교수협의회 하계 워크숍 건

-8월 초(장소·일시 미정) 운영위원 참석 독려

08. 정년퇴임교수 전별모임 건

-8월 초순, 2015년 2월 초순

09. 통합운영위원 회의 건

-9월 25일(차기 운영위원 추천)

10. 추계등반대회 및 신임교수 환영 건

-일 시 : 9월 27일(토) 10시 죽전 법화산

-모임장소 : 죽전 야외음악당

-중 식 : 천하장사

11. 2학기 장학금 전달 건

-10월 30일 2명(죽전캠퍼스 1명, 천안캠퍼스 1명)

12. 학교 중·장기(2040년까지 10년 단위) 발전계획안 수립 건의 및 수립 시 교협 참여 건

-기획실장과 면담 및 교협 내 TFT 구성 예정

13. 교협 개선방안 수렴 건

-전체 교수에게 공문 발송(수시 의견 접수-기명·무기명 모두 가능) 예정

14. 14기 회장 및 감사 선거 관련 건

-선거기간 : 11월 17일 ~ 11월 28일

제13기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과의 더욱 활발한 접촉을 통해 학내 불통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본회의 슬로건인 ‘소통 속에 화합하는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교수님들을 위한 교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교협통신은 회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학내 소통의 작은 공간을 꿈꾸며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투고 요령 : 익명 또는 기명의 원고를 작성하여 본회 전자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e-Mail : prof@dankook.ac.kr